

마은혁 임명 놓고 與野 신경전… 韓-崔 쌍탄핵 가능성까지

민주당 “오늘 미임명 시 중대 결심”
한덕수에 면담 요청했지만 거부

국민의힘 “마 후보자, 합의 안 돼”
조국혁신당 “韓·최상목 탄핵하자”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4월1일까지 임명하지 않을 경우 ‘중대 결심’에 나서겠다고 ‘재탄핵’ 가능성까지 나오는 가운데, 최상목 경제부총리 장관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 가능성까지 남아 있어 국회에 ‘쌍탄핵’을 둘러싼 전운이 감돌고 있다.

범야권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3월 초중순에 선고될 것으로 보았으나, 3월말까지 선고가 나지 않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당력을 쏟는 상황이다. 야당은 진보 성향의 마 후보자가 현재 재판관이 되면 탄핵 인용 결정에 힘을 보탬 것으로 보고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으나, 여당은 마 후보자의 경우 여야가 합의해서 추천한 후보자가 아니라며 임명에 강력히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사실에서 열린 국회 의장-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발언하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바라보고 있다. /뉴시스

반대하고 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월 31일 오전 국회 비상대책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최상목 (당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을 임명하는 것이 맞다는 당의 결론이 있었다”며 “특히, 마 후보자는 국회 합의를 거쳤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당의 판단은 편

향된 이념을 가진 분을 헌법을 해석하는 현재 재판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해왔다”고 말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추경 논의와 임시국회 일정 합의를 위해 우원식 국회의장과 만났으나, 서로 거친 인사를 쏟아내며 감정의 골만 확인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덕수

권한대행은 현재의 결정을 취사선택할 권한이 없음에도 자신에 대한 결정은 따르면서 마 후보자 임명결정을 아직까지 주저하고 어쩌면 거부하는 이중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현재의 온전한 구성을 방해하고 내란을 지속시키며 헌정 붕괴와 경제 위기를 키운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 한 권한대행이 오늘 즉시 마 후보자를 임명하길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왜 마 후보자에게 집착하나. 마 후보자는 대한민국 헌법 체제를 수호할 의지가 없는 사람”이라며 “마 후보자는 이미 대학 시절에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신봉하며 북한에 따라서 혁명 운운했던 사람”이라고 폄했다.

이어 “국회에서 폭력을 행사한 민주노동당 당원에 대해 공소기가 관정을 내린 이념에 경도된 진영 논리에 충실한 판사”라며 “이런 판사를 헌법 수호의 최후의 보루인 현재 재판관에 임명할 수 있겠냐”라고 반문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게 제시한 시

한을 하루 남긴 오늘, 면담을 요청했으나 한 권한대행은 이를 거부했다. 민주당 4~6선 국회의원 22인은 이날 한 권한대행의 면담 거부 사실을 알리며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정형성이 결여된 권한대행에 불교한 한덕수 총리가 국가 최고 사법기관인 현재의 결정과 입법부의 선출권을 무력화하려 한다면, 한덕수라는 이름은 내란 장기화의 주범으로서 내란 시작의 주범인 윤석열과 함께 역사에 박제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3정당 조국혁신당도 민주당의 결단을 요청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최고위원회의에서 “행동의 시간이 왔다”며 “한덕수, 최상목을 탄핵하자”고 말했다.

한편,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CBS라디오에 나와 “민주당 자체에선 전체적인 전략이나 큰 방향에 대한 것들은 이미 수립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한 권한대행이 내일 어떤 입장을 내는지 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늦어지는 尹 탄핵 선고… 마지노선은 ‘이달 11일’

현재 권위 의문 여론 높아져
與野 모두 ‘빠른 선고’ 촉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3월에도 이뤄지지 않으면서 여론의 눈길은 이번주 선고 여부에 쏠려 있다. 지난 2월25일 변론이 종결된 지 한달이 지났음에도 헌법재판소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각종 낭설이 떠도는 가운데, 선고의 마지노선은 4월11일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3월 31일 기준으로 지난해 12월14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탄핵안)이 가결된 지 108일째가 됐다. 탄핵안 접수부터 선고까지 91일 걸린 박근

해 전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보름 이상 더 걸리는 상황이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변론이 17차례 있었지만, 이번에는 11차례의 변론을 가지며 선고가 더 일찍 나올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었다. 하지만 현재는 한달 넘게 평의만 반복하고 있다. 이날도 현재는 오전부터 평의를 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가운데 ‘현재 내 재판관들의 의견이 갈린다’, ‘모 재판관이 진행을 늦추고 있다’ 등 온갖 낭설이 나오고 있다. 급기야 ‘문형배·이미션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18일 이후에도 선고를 못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라

는 현재의 권위에 의문을 표하는 여론이 높아지는 모양새다.

국민의 불안이 높아지는 이유는 사실상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탄핵심판은 180일 내 결론을 내려야 한다. 그러나 4월18일에 문형배·이미션 재판관이 퇴임할 예정이고, 이 경우 헌법재판관은 8인에서 6인으로 줄어든다. 두 재판관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리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할 수 있는지를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기에 사실상 6인 체제로 시간이 흐를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6인으로는 탄핵심판 선고가 불가하다. 헌재법 23조에 따르면 ‘재판

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돼 있어서다. 그렇기에 4월 18일 이전에 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불확실한 상황이 오랜기간 이어질 우려가 나온다.

이 때문인지 이제는 여야 모두 빠른 선고를 촉구하고 있다. 파면을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결단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고 강조했고, 국민의힘 역시 “이제 헌법재판소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다. 초시계까지 들이대며 졸속 재판을 밀어붙이더니, 정작 판결은 차일피일 미루는 이유가 뭐냐”라고 지적했다.

일단 이번주 현재에 예정된 일정은

없다. 월요일(24일) 국무총리(한덕수) 탄핵 선고, 목요일(27일) 정치 선고가 있던 지난주와는 다르다. 수요일인 4월 2일에는 선고기일이 통지돼야 금요일인 4월4일 선고가 가능하다. 만일 4월2일까지 선고일자가 안 나오면 이번주 역시 탄핵심판의 결론을 볼 수 없다는 의미가 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재판관들이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면서, 이번주 선고도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최후의 마지노선은 4월 11일 선고다. 문형배·이미션 재판관이 18일에 퇴임하기 때문에, 퇴임하는 주에 중대한 사건을 선고할 여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4월 9일까지 선고기일이 발표되지 않는다면 정국은 더욱 혼란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서예진 기자 syj@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31일 경기도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 수팩스센터를 방문해 광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한덕수 “몰려오는 도전 극복… 오늘 경제안보전략TF 발족”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 방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SK하이닉스를 방문해 “2위와의 격격한 차이를 갖고 있는 반도체 산업을 굳건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격려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31일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를 방문해 경영진들과 간담회를 갖고 “대한민국에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 경제안보전략TF(테스크포스)를 내일 발족시킨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25일 통상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그간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주재해온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권한대행 주재의 ‘경제안보전략TF’로 격상해 개편 운영하기로 한 바 있다. 미국 발(發) 관세전쟁으로 인한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에서다.

한 권한대행은 “지금 수출 1위 효과 산업인 반도체가 거의 1400억 달러 이상”이라며 “도전은 밀려왔지만 기술력, 또 일하는 생산직들과의 좋은 노사관계 등을 발휘해 정부와 같이 협력해 온 세계에 불어닥친 쓰나미를 반드시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새로운 글로벌 서플라이체인(공급망)의 도전에 정부와 기업이 국민과 힘을 합쳐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서예진 기자

국민의힘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요청”

“부결 시 자본시장법 개정할 것”

국민의힘이 31일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정부에 요청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주주 이익을 위해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하며 만약 재표결에서 부결될 경우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소수 주주를 두텁게 보호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상법 개정안은 법인 이사의 총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권 원내대표는 “글로벌 관세 태풍 속에서 지금은 시장 안정성은 높이고 불확실성은 줄여야 할 때”라며 “민주당은 지난 13일 여야 합의 없이 상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며 경제 혼란을 키웠다”

고 지적했다.

그는 “불합리한 쪼개기 상장과 물적분할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그래서 여당과 정부는 소수 주주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해 왔고, 주주는 물론 경제계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00만 중소기업과 비상장기업까지 모두 영향 받는 상법 개정안을 밀어붙였다”며 “그 결과 비상장사까지 무한 소송과 경영권 방어에 휘말릴 것이고, 결과적으로 시장 전체의 손실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1일 정례 국무회의를 앞두고 국무회의 직전 국무위원 간담회를 소집해 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이들의 의견을 종합해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태홍 기자